탄 원 서

제출 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 귀중 [현재 재판부·사건번호 제출 전 확인]
대상자	안무성	당시 대령·준장 진급 예정	전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혐의 및 절차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관련
사건번호	_____ [공식 사건검색 후 기재]

1. 시민으로서 드리는 탄원

저는 피고인 안무성과 친족·친분 관계가 없는 시민이며 전체 재판기록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제9공수여단 병력의 목적지별 임무와 지휘관의 인식를 사실과 증거로 구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의 무고함이나 인품을 직접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개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책임 범위를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2. 현재 확인되는 사건 경과

특검은 선관위 관악청사 및 관련 기관에 병력을 투입해 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언론은 당시 계급을 준장 진급 예정자로 소개했습니다. 특검은 제9공수여단 병력의 선관위·여론조사기관 관련 출동을 내란 가담으로 보았으며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계급은 대령·준장 진급 예정으로 구분했습니다.

3. 개인별로 가려야 할 사실

출동 병력의 편성명령과 구체적인 임무지시, 경계·확보·출입통제 중 어느 활동을 지시했는지, 부대원이 실제 이행한 조치와 보고 내용을 구별해 확인해 주십시오. 부하의 행동 전부를 여단장의 사전 의사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반대되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상급자의 명령을 전달한 행위,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한 행위, 구체적 강제조치를 실행한 행위의 고의와 범죄 기여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인식했음에도 집행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역시 엄정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5. 적용 법률과 판단 요소

형법 제87조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의 유형 구별)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령 수령·전파, 현장 시설 확보, 강제적 출입 통제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각 행위의 지휘·재량 범위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개별 증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6. 사건기록에서 특정하여 확인할 증거

출동 부대 명단, 목적지별 임무 지시, 현장 지휘관 보고, 건물 진입·서버 확보 시도의 유무를 구별해 주십시오.

7.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비적 양형 요청

지휘관의 명령권 범위, 실제 통제 가능성, 현장 상황의 급박성, 집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조치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와 책임을 개별화해 주십시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주시되, 확인되지 않은 반성·가족관계·건강을 선처 사유로 추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8. 결어

특히 제9공수여단 병력의 목적지별 임무와 지휘관의 인식를 상세한 증거로 확인하시어, 피고인 안무성의 행위 중 고의와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십시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의 실제 역할에 상응하는 판단을 청합니다. 재판의 독립성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확인 가능한 공개 출처 (보도는 공판조서·판결문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09.18 뉴시스 | 군 관계자 8인 결심공판·구형·방정환 최후진술